

2026
Vol. 2
통권 제4호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 INSIGHT

세종인사이트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SEJONG RESEARCH INSTITUTE

2026
Vol. 2



CONTENTS

- 01 주민자치 기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모델 도출 | 김 흥 주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02 평균임금 높은 세종시, 성별임금격차에도 주목해야
— 고용노동부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 최 성 은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03 세종시 홍수 취약성 평가 연구 : 미시적 분석과 맞춤형 저감 전략 | 송 양 호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I. 배경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구축 필요성 확대

- 평생학습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접근성 부족은 여전히 주요 제약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따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주민생활권 중심의 학습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운영모형 마련 필요

- 세종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복합커뮤니티센터 중심의 생활SOC, 도농복합 생활권 구조를 갖고 있어 지역별 학습수요와 여건이 상이함
- 따라서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형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모형 구축이 요구됨

- (접점)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은 법적·가치적·운영적 차원에서 연계 가능성을 지니며, 주민성장과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함
- (운영상 특징)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조직화에 강점을 가지며, 평생학습센터는 학습상담,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확보에 강점을 가짐
- (정책적 시사점) 두 제도의 연계는 단순한 조직 통합보다 기능별 역할을 유지하면서 공동사업, 공간공유, 네트워크 협력 등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분석적 함의) 생활권 기반 평생학습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 안정적 재정지원, 주민 참여확대 등 지역학습생태계 구축 관점의 접근이 요구됨

II. 읍·면·동 평생학습 개념 주민자치회 연계

● 평생학습 및 읍·면·동 평생학습의 개념

- 평생학습의 개념 및 읍·면·동 평생학습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개념) 평생학습은 개인의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의미하며, 개인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 지역 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학습체계임
- (제도적 변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었으며, 주민생활권 중심의 평생학습 지원체계가 강화되고 있음
- (특성) 평생학습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주민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본 형성,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특징을 가짐
- (읍·면·동 평생학습) 읍·면·동 평생학습은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밀착형 학습체계로서 학습권 보장, 지역문제 해결, 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함

● 주민자치회와 평생학습의 관계 및 시사점

- 주민자치회와 평생학습의 관계 및 연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관계)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를 지향하며, 평생학습은 주민의 참여 역량과 시민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함

III. 세종시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연계 필요성 및 타 지자체 사례의 시사점

● 세종시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첩 및 연계 필요

- 세종시는 시-평생교육진흥 기능 수행기관-주민자치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평생학습센터와 주민자치센터는 모두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시민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의 기능이 일부 중첩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프로그램 중복, 역할혼재,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두 제도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도 연계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1]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조례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 비교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목적	•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평생교육 진흥, 취약계층 지원	• 주민자치 활성화, 문화·복지·편익 제공, 시민교육 기능 포함
접근 방식 및 특징	• 시장 주도의 시행계획 수립 및 협의, 예산 지원 (법적 근거: 「평생교육법」에 따라 진흥계획 수립)	• 읍·면·동 단위 운영, 주민참여 중심, 시설·프로그램 제공 (법적 근거: 주민자치 활성화)
운영 기관	•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진흥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강사
의사 결정 구조	• (협의회) 시장 심의·의결, 위원 구성·임기 규정, 전문가 참여 가능	• (주민자치회) 센터 운영 심의, 운영위원·자원봉사자 활용, 주민참여 강조

자료: 김흥주·김지영(2025:67-68) 재구성

주민자치 기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모델 도출

타 지자체 사례는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모형 구축의 중요성 시사

-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관계는 통합형, 분리형, 혼합형, 통합 후 재분리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통합형은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고, 분리형은 역할구분이 명확하며, 혼합형은 협력과 유연성이 강한 특징을 보임
- 이는 특정 모델이 절대적으로 우수하기보다 지역 특성과 제도 환경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며, 세종시 역시 주민자치의 참여성과 평생학습의 전문성을 결합한 세종형 운영모형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함

[표2]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모델 유형 비교

지 역	모델유형	주요 특징	합 의	한 계
경기도 이천시	(제도기반) 통합형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제도적 통합	제도적 안정성·자율성·책임성 확보	조례 정비 필요, 지역별 편차
충청남도 아산시	통합형	일부 연계는 존재하나 제도적 통합은 제한적	유연한 기능 확대 가능	제도적 통합 근거·구조 미흡
충청남도 당진시	분리형	각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 명확	전문성 강화, 역할 갈등 최소화	프로그램 중복, 공간 활용 갈등 가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혼합형	지역 자원과 다양한 조직 간 협력 구조	접근성과 프로그램 다양성 강화, 갈등 최소화	복잡한 거버넌스 관리 필요
광주광역시 광산구	혼합형	주민자치회 사업 주체, 평생학습 매니저와 지역 조직 공동 운영	주민주도 문제해결, 지역특화 학습	조례상 자치회 역할 명확하지 않음
경기도 의정부시	통합후 재분리형	주민자치회 중심 위·수탁 운영	지역 특성 반영, 주민주도성 강화	세대 간 갈등, 역할 분담 조정 필요

자료: 김홍주·김지영(2025:155) 재구성

세종형 평생학습센터 거점형(Hub) 모형

-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상급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학습거점을 구축하고, 주변 마을을 순회 지원하는 집중형 운영방식임
- 학교 및 지역기관과 연계해 귀농·귀촌 교육, 디지털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나, 초기 인프라 구축 및 순환 인력 확보가 과제로 제기됨

세종형 평생학습센터 생활세계형(Community-based)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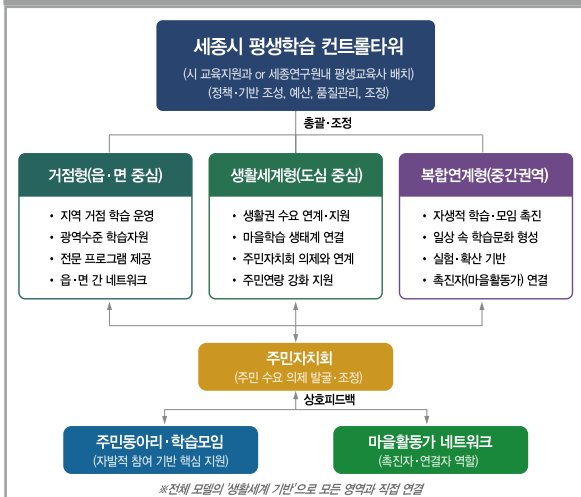
- 동·생활권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복합커뮤니티 센터 기반의 주민참여형 학습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식임
-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에 강점이 있으나, 프로그램 전문성과 지속성 확보가 주요 과제임

세종형 평생학습센터 복합연계형(Hybrid) 모형

- 도시형과 읍·면 거점형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자원과 프로그램을 공유·순환하는 통합형 운영방식임
- 세종시 교육지원 기능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민자치회·학교 등과 협력하는 구조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나 협력 조정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임

IV. 세종시 평생학습센터 운영모형 도출

[그림 1] 세종형 평생학습센터 운영모형 도출



자료: 김홍주·김지영(2025:220)

I. 논의 배경

● 국정 기조 부합 및 기초자료 확보

-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기조에 대응하고, 지역 노동시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의성 높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함
- 특히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임금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과 성별임금격차를 함께 진단할 필요가 있음

● 고용형태별 격차 구조 확인 필요

- 성별임금격차는 상용·임시·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별로 다르게 나타남
- 특히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서 세종시의 격차가 전국보다 크게 확인되어, 고용형태별 격차 구조에 대한 세부 분석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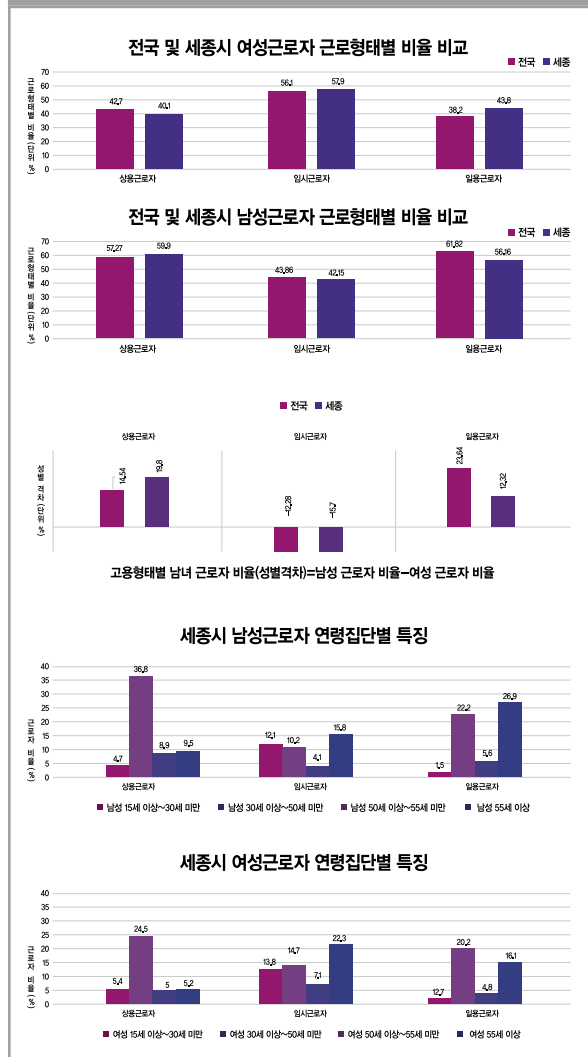
● 세종시 임금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진단 필요

- 세종시는 전국 대비 평균임금과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나, 남녀 임금근로자 간 평균임금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따라서 세종시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성뿐 아니라 임금형평성 관점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고용형태별 성별 분포 차이

- 상용근로자는 남성 88,529명, 여성 59,268명으로 남성 비중이 높음
- 임시근로자는 남성 10,862명, 여성 14,910명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일용근로자는 남성 20,557명, 여성 16,048명으로 남성 비중이 높음

[그림 1] 세종시 근로형태별 근로자 현황



● 연령집단별 고용형태 차이:

핵심 경제활동 연령층에서 성별 차이 확인

- 남성 상용근로자는 30~50세 미만 비중이 36.8%로 가장 높아, 핵심 경제활동 연령층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를 보임
- 반면, '55세 이상'의 경우, 남성 일용근로자 26.9%, 여성 임시 근로자 22.3%를 차지함
- 특히, 여성은 '30~5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 일용근로자 비율이 20.2%로 높게 나타나, 성별 임금격차 원인 해석 시 고용형태와 연령 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II.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 대상 및 범위의 확장

- 2021년 11월에 발간한 세종시·노사민정협의회 의 선행연구 (취약직종 권익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는 가사·육아도우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특정 직군에 한정되어, 전반적인 비정규직 및 감정노동자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었음

● 원시데이터 기반 교차 심층 분석

-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직접 가공하여, 임금근로자를 상용·임시·일용근로자,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함*
- 이를 통해 세종시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 기준 성별 임금 격차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시장의 임금형평성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함

*2024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지역별고용조사 C형 시도 단위 마이크로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연구자 재구성

III. 세종시 근로형태별 근로자 현황

● 상용근로자 중심의 고용구조

- 세종시 임금근로자는 210,175명이며, 이 중 상용근로자는 147,797명으로 전체의 약 70.3%를 차지함
- 이는 전국 상용근로자 비중 57.1%보다 높은 수준임

1) 이 글은 2025년 본 연구원에서 수행된 정책과제 <세종시 취약직종 근로자 현황 및 규모 추정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 최성은)> 결과에 기반하고 있음 <https://sri.re.kr>

IV.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의 성별격차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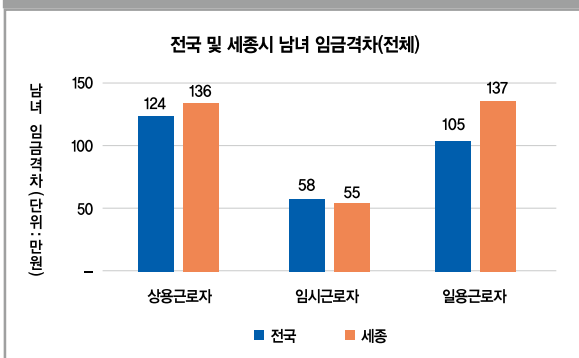
● 높은 평균임금에도 불구하고, 성별임금격차 뚜렷

- 세종시 임금근로자의 조사시점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은 371만 원으로 전국 평균 286만 원보다 85만원 높음
- 그러나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전국 수준을 상회함

●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상용·일용근로자 격차 확대

- 상용근로자 남녀 임금격차는 세종시 136만 원으로 전국 124만원 보다 큼
- 일용근로자는 세종시 137만 원으로 전국 105만 원보다 크게 나타남
- 임시근로자는 세종시 55만 원, 전국 58만 원으로 유사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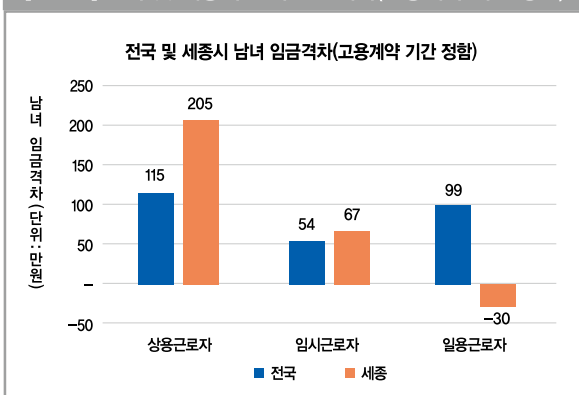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및 세종시 남녀 임금격차(전체)



●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상용근로자 격차 심각

-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상용근로자의 남녀 임금격차는 세종시 205만 원으로, 전국 115만 원의 약 2배 수준임
- 기간제 상용근로자 내부의 성별 임금구조 점검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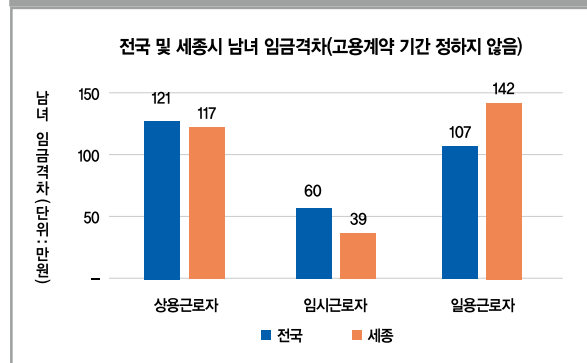
[그림 3] 전국 및 세종시 남녀 임금격차(고용계약 기간 정함)



●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 일용근로자 격차 두드러짐

-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남녀 임금격차는 세종시 142만 원으로, 전국 107만 원보다 높음
- 여성 일용근로자의 저임금 집중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전국 및 세종시 남녀 임금격차(고용계약 기간 정하지 않음)



● 핵심 시사점

- 세종시는 평균임금이 높은 지역이나, 일부 고용형태에서는 성별임금격차도 큰 지역임
- 노동정책의 초점을 고용안정성에서 임금형평성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IV. 제도적·운영상 과제: 통합과 조정의 단계

● 성별 임금격차 원인 진단 및 제도적 개선

- 세종시는 모든 고용형태에서 전국보다 평균임금 수준이 높게 나타나지만,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서는 성별임금격차가 전국보다 크게 확인됨
- 이에 따라 직무, 근로시간, 근속기간, 고용계약 형태, 경력단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정밀 진단할 필요가 있음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임금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마련해야 함

● 30~50세 미만 여성 일용근로자 대상 심층 실태조사 추진

- 전국적으로 일용근로자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나, 세종시는 여성 일용근로자 중 30세 이상~50세 미만 비중이 20.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는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 단기·불안정 일자리 집중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음
- 해당 집단의 고용 불안정 원인, 근로시간, 임금수준, 사회보험 가입 여부, 일자리 진입 경로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

● 성별·연령별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

- 성별·연령별·고용형태별로 세분화된 취약근로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 임시·일용근로자, 기간제 상용근로자 등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집단을 중심으로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정책 모니터링 강화

-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정례 분석하여 성별임금격차 변화와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I.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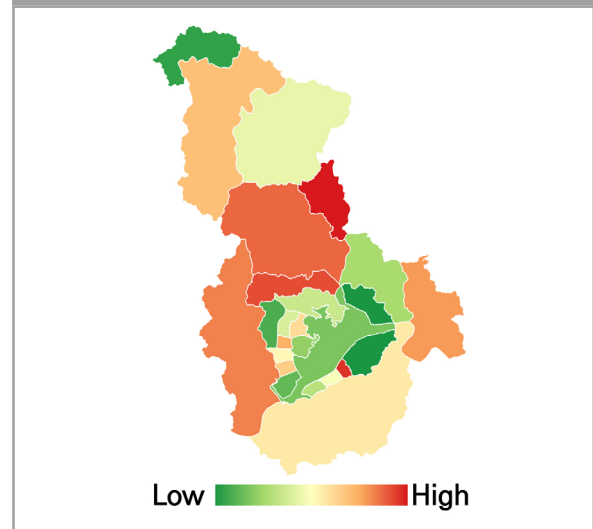
● 복합적 재해 위험 요인의 내재와 미시적 접근의 필요성

- 세종시는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을 표방하며 조성된 국가 핵심 행정도시이나, 급속한 도시 개발 속도에 비해 불투수 면적 등 도시 물순환을 관리하는 법적·행정적 체계가 미비하여 구조적인 홍수 취약성을 내재하고 있음
- 특히 중앙 행정 기능이 집적된 특성상, 홍수 재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기능 마비라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기존의 홍수 취약성 평가는 주로 시·군·구 단위의 광역적 분석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하천변이나 저지대, 반지하 밀집 지역 등 국지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물리적 피해액 추정은 물론 인명 피해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피해 양상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의 미시적 분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유형·구조(Tangible · Structural) 취약성

: 평균 공시지가, 건축물 밀도, 노후건축물 및 반지하 밀도를 바탕으로 물리적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경제적 노출도를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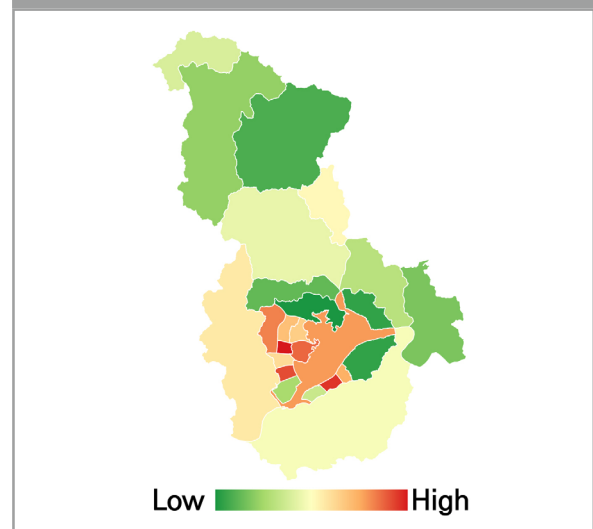
[그림 2] 유형·구조 부문 홍수 취약성 산정 결과



– 입지·환경(Location · Environmental) 취약성

: 하천점유율, 평균해발고도, 불투수면적율, 저지대 비율을 통해 지형 및 토지 이용 등 지리적 조건에 따른 환경적 위험을 분석함

[그림 3] 입지·환경 부문 홍수 취약성 산정 결과



- 평가지표의 가중치 산정 과정에서는 평가자의 주관적 편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데이터 자체의 변별력(정보량)에 기반하는 '엔트로피 가중치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였음

II. 평가 모델 및 지표 설계

(H-T-L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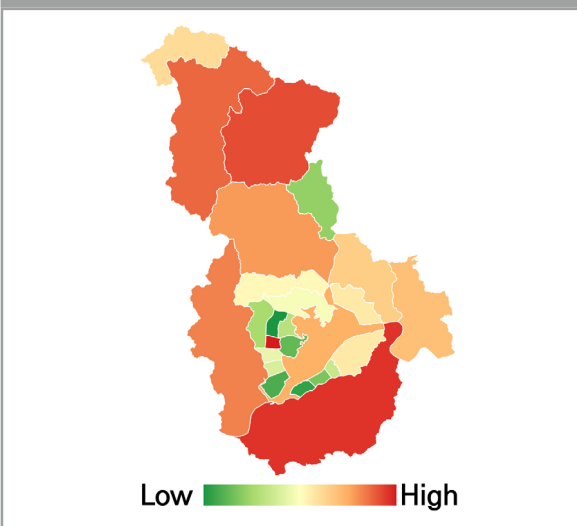
● 도시·농촌 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 평가 체계 구축

- 본 연구는 세종시의 이질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취약성의 근원을 세 가지 차원으로 분할하는 'H-T-L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적용하였음

– 인적·관리(Human · Management) 취약성

: 인구밀도, 재해취약인구(고령, 영유아, 장애인), 1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밀도 등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과 사회적 관리 수준을 진단함

[그림 1] 인적·관리 부문 홍수 취약성 산정 결과



1) 이 글은 세종연구원에서 2025년 기본연구로 수행한 “세종시 홍수 취약성 평가 연구: H-T-L 프레임워크 기반 미시적 취약성 분석” <https://sri.re.kr>에 기반하고 있음

III. 세종시 홍수 취약성의 공간적 특성 및 핵심 요인

● 읍면동 단위 ‘도·농 간 노출 이중구조’ 확인

- 분석 결과, 세종시의 홍수 위험 노출은 인구 및 자산 밀도에 따라 신도심(동)과 구도심 및 농촌(읍면) 간에 명확한 이중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신도심(고밀도 노출)

: 종촌동, 새롬동, 소담동 등은 인구 밀집도와 자산 가치가 매우 높아 홍수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와 혼잡이 극대화되는 고위험 지역임

– 외곽 지역(저지대 노출)

: 전의면, 연서면, 금남면 등은 인구 노출은 낮으나 1차 산업 종사자 밀도와 하천 점유율이 높아 농경지 및 생계 기반 시설 손실이 우려되며, 이는 장기적인 지역 경제 회복탄력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표 1] 홍수 위험을 결정하는 5대 핵심 요인

지 역	영향력 분석
인구밀도	• 인구 밀집은 잠재적인 인명 피해 규모를 확대하고, 재난 시 대피 활동을 복잡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위험 • 신도시 ‘동’ 지역의 높은 FVI는 이 지표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불투수면적률	• 도시화의 강도를 대변하며, 불투수면의 증가는 빗물의 지표면 유출량 및 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켜 도시 배수 체계에 과부하를 유발하고 침수 위험을 증대시킴
저지대 비율	• 지형에 따라 강우유출수는 어디로 흐르고 모이고 고일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제 변수임 • 최대 가중치는 지형적 특성이 홍수 위험의 기본값을 설정하는 지배적 요인임을 가리킴
공무원 밀도	• 두 지표 모두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은 것은 지역 간 제도적·물리적 대비 태세의 편차가 커 이것이 곧 지역의 회복탄력성 격차를 결정지음을 시사함
민방위 대피시설 밀도	• 도심 행정 중심지에 자원이 집중되고 농촌 지역은 심각한 결핍 상태에 있는 현실이 취약성 불균형의 주요 원인에 해당함

● 고찰 및 시사점

- 연구결과, 세종시 홍수 위험은 인구 중심의 도시 지역과 지리적 특성 중심의 농촌 지역 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이중 구조를 띠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이는 각 지역의 홍수 위험 성격과 실제 피해 양상이 근본적으로 상이함을 시사함
- 따라서 고밀도 도심 지역은 인명 안전 확보와 대피 체계의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고, 외곽 농촌 지역은 기반 시설 보호와 장기적인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방재 전략 구축이 필수적임

IV. 맞춤형 홍수 취약성 저감 전략 및 정책 제언

- 미시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질적 위험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4가지 이원화된 방재 전략을 제안함

● 고밀도 도심 핵심지역: 인구밀도 및 불투수면적 통합 관리

- 신규 상업 및 대규모 주거 개발 시 투수성 포장, 옥상 녹화, 식생수로 등 저영향개발(LID) 및 녹색 기반시설(GI) 도입을 의무화하는 ‘(가칭) 녹색 기반시설 의무화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여 시행해야 함

● 구조적 민감 구도심: 노후 기반시설 성능의 표적 개선

- 조치원읍과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 위험이 큰 지역에는 노후 건축물 및 반지하 주택에 차수판, 역류 방지 밸브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맞춤형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함
- 또한 가장 위험도가 높은 배수분구를 선정하여 하수관로 개량에 자본개선예산을 집중 투입해야 함

● 농촌 외곽 지역: 행정 및 인프라의 적응 능력 격차 해소

- 상대적으로 방재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 ‘면’ 지역의 기본 서비스 보장을 위해, 평시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재난 시에는 공인된 대피소 역할을 수행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센터’ 건립이 필요함
- 더불어 소외 지역에 행정력을 즉각 투사할 수 있는 ‘이동식 현장 지휘차량 시스템’ 도입을 고려해야 함

● 지형적 고위험 지역

: 저지대 토지이용규제 및 자연기반해법 적용

- 상습 침수 위험이 높은 완경사 저지대는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신규 주거시설 개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 취약한 하류 지역으로 쏟아지는 유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상류 지역의 기존 습지를 복원하고 홍수터를 넓히는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 투자를 확대해야 함



<https://sri.re.kr>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세종연구원] 3015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SM메디컬센타 5,6층)

Tel. (044) 550-3500 Fax. (044) 555-3599

발행인. 권영걸 편집인. 이인희 등록번호. 세종, 바00043